



보도시점 2024. 5. 21.(화) 14:50 이후 배포 2024. 5. 20.(월) 14:00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 결과 전년대비 규모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기후관련 ODA 비중 확대 등을 강점으로 평가

-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래 세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 실시 -

- 우리나라에 대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가 5월 21일(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 등 우리 정부와 OECD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 동료검토(Peer Review) :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도모

-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세 별첨)

* 제1차 동료검토(2012년) 및 제2차 동료검토(2018년)

- OECD는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

▲(ODA 규모) 2024년 ODA 규모가 전년대비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등

▲(파트너십)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한 31개 지표 활용

▲(그린 ODA) 기후 관련 ODA 비중이 2015년~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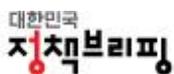
▲(지원 수단 다양화)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 강화 및 비구속성 원조 비중 확대

- 한편,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보았습니다.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금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3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동료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간 한국 ODA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 향후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1) OECD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첨부2) OECD DAC 「2024 동료검토 보고서」 권고사항
 (첨부3) OECD DAC 및 동료검토(Peer Review) 개요

담당 부서 <공동>	국무조정실 대외협력과	책임자	과 장	강정실 (044-200-2154)
		담당자	사무관	전신영 (044-200-2168)
담당 부서 <공동>	외교부 개발의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기천 (02-2100-8131)
		담당자	사무관	황혜정 (02-2100-8132)
담당 부서 <공동>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의순 (044-215-8710)
		담당자	사무관	김정도 (044-215-8715)



참고1

2024 대한민국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내용

* 보고서 원문은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참고

1 우리나라 개발협력 현황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올해 OECD DAC에 가입*('10년)한지 14년 경과,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에 있음
 -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ODA 규모 확대*,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에 노력**
 - * ('23) 4.8조원 → ('24) 6.3조원, 전년 대비 31.3% 증가
 -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목표
- 국조실·외교부·기재부를 비롯한 40여 개 기관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ODA 시행, 이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기반 마련·운영중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202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분야별 범정부 전략* 수립, 유·무상 및 공공·민간 간 전략적 패키지사업 실시 등
 - * (중·장기)종합기본계획 (분야)그린·ICT·농업·보건 (지역)국가협력전략, 아프리카·아세안

2 평가 및 권고사항 개요 (Executive Summary)

- 주요 양·다자 파트너와 전략적 대화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대폭 증가한 ODA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파트너 및 수단 활용 가능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에 근거,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국내 정책이 개도국의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
- DAC 평균(29%)을 상회하는 그린 ODA 규모(35%)에 대해 긍정평가, 그린 ODA 지속 확대를 위해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등을 타 기관에 확대 필요

-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협력국과의 고위급 정례대화 확대 등으로 지속가능성·효과성 제고 노력 지속 필요
- 2024년 인도적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등에 대해 환영할 만한 조치로 평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계획 등 토대 마련에 대해서도 평가
 - * 인도적 지원 예산 : ('23년) 4,036억원 → ('24년) 8,965억원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으로 국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을 '18년 동료검토 이후 확실한 성과로 평가
- 기관역량진단* 결과 등을 참고하여 ODA 재원 배분시 높은 역량을 갖춘 시행기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고려
 - * 10억원 이상 예산 운영 기관 대상, 성과관리체계·평가 수행 역량 검토
- 평가·감사를 통한 책무성 확보에 더해 시행기관 간 사업 시행의 교훈(lesson)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ODA 사업 전반의 품질 제고 필요
- 개발협력 분야 인력 확충은 한국의 ODA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중요한 과제이며, 시민사회, 학계,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pool 확대 필요

- **(정책일관성)**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을 시행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대내외 정책과 해당정책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도록 충실히 운영해야 한다.
 - ②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행정계획 검토의무에 기반하여 국내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초국경적 영향을 일부 핵심분야에서부터 고려하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부처 간 정책 심의에 개발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 **(파트너십)** 한국은 다자개발은행(MDB), 여타 다자기구 및 양자공여기관과 프로젝트 중심 협력을 넘어서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ODA 규모 확대 목표에 걸맞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 **(기후변화)** 한국은 그린 ODA 전략을 기반으로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및 KOICA 탄소중립 ODA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확산하는 등 모든 시행기관이 기후 관점을 개발협력 사업에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 **(평가결과 활용)** 한국은 규모가 확대된 ODA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기관역량진단과 더불어 여러 평가의 결과 및 교훈을 활용하여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목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과관리 역량이 우수한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협력국 고려)** 한국은 협력국의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증가한 ODA 재원을 배분해야 하며, 프로그램 차관 및 정책대화 등 기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정책대화)** 한국은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측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협력국 당국,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 보다 넓은 범위의 개혁 프로세스와 정책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및 정례 정책대화를 확대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기존의 조정 기제를 활용해야 한다.
- **(시민사회)** 한국은 국내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한국의 사업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고, 현지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현지 주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 **(현장 권한 위임 확대)**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패키지화 시범사업 및 외교부와 기재부가 주관하는 유·무상원조 협의체의 사업연계와 이행순서 조정 과정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범위 설정, 사업 발굴, 공동 발굴, 대형 패키지 프로그램 조정 등에 있어 현장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협력국 국가 차원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 **(인적자원)** 한국은 양질의 사업 확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역량이 있는 개발협력 담당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협력국과의 신뢰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개발협력 담당 직위의 직무순환 주기를 연장하고, 협력국 현장인력을 확충하며, 현지채용 인력의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국 내 입지 강화에 현지채용 인력이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민간재원)** 한국은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민간재원 동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해야 한다.
 - ① 시행기관의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risk appetite)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한다.
 - ② 협력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예산지원 등 비구속성 원조를 지속 확대한다.
 - ③ 유무상 원조, 기술지원, 기관 간 지식공유를 통합하는 사업 및 기금을 통해 혼합금융 시범사업을 더욱 장려한다.

참고3

OECD DAC 및 동료검토(Peer Review) 개요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 OECD 산하 약 30개 위원회 중 하나이며, OECD 회원국 중 가입 심사 기준*을 통과한 회원에게만 자격 부여

* ①개발협력 조직·전략·정책 보유, ②적절한 원조 규모(총액 1억불 이상 또는 ODA/GNI 0.2% 이상), ③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평가시스템 보유

- 현재 31개국과 EU가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한국은 2010년 회원 가입

※ DAC 회원국 현황(2024.5월)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EU

- DAC은 對개도국 개발협력 활동과 관련된 정보 교류 및 ODA 관련 정책에 대한 공여국 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

- 회원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필요

* ① DAC 채택 권고사항 이행, ② ODA 통계 제출, ③ 동료검토(Peer Review) 수검 및 심사국 참여, ④ DAC 회의 및 분과위원회 참석 등

□ 동료검토(Peer Review)

- 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주기적(5-6년 단위) 평가*를 통한 상호학습(peer learning) 체계로, 각국은 동료검토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

* 평가단은 DAC 사무국인 OECD 개발협력국(DCD)과 DAC 회원(2개국)으로 구성

-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